

NGO SERIES #04



시민운동 지지층과 비판층의 비교분석

김재한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유기업원

발간사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NGO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익숙한 것이 되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만큼 날로 커지고 있다. NGO의 숫자도 급속하게 늘어나서 정부에 등록된 숫자만 해도 3,800여개가 넘고 있다. 언론에서는 NGO 섹션을 따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학계에서도 ‘비영리학회’, ‘NGO학회’ 등 NGO 관련 연구그룹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한국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NGO가 급성장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NGO의 급성장은 한국사회의 강한 활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에너지가 NGO의 양적 팽창에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NGO의 질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학계의 노력이다. 최근 들어 NGO 관련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NGO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NGO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선언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NGO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의 현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찬반 양론이 경쟁하는 가운데 정교한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기업원에서는 한국의 NGO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NGO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양적으로 급팽창한 NGO의 활동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한편 살려나가야 할 장점들을 옹호함으로써 NGO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가 NG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언론인, 일반인들에게 토론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6월

자유기업원장 민병균

훑어보기

글은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계층과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계층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인식을 비교해봄으로써 누가 한국 시민단체 지지계층을 구성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불신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불신 또는 직접 시민단체 참여활동여부도 NGO에 대한 지지/비판에 포함된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 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 시민단체 회원활동 등 세 가지 인식 또는 행위에 대한 종합적 배경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친NGO 계층은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또 타()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NGO에 대해 좀 더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학벌(학력/학연)·연령·출신지역·성(남/녀)·장애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NGO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시킨다. NGO 지지자들은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간본성, 사회지도층, 부자, 전문가 집단 등 기존 질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남을 이용하고 속이려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전문가의 말이라도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NGO 지지자들은 빈부간 불신과 여야간의 불신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사회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불공정하여 중립성 실천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NGO 지지자들은 혈연(血緣)·지연(地緣)과 같은 전통적 연고를 덜 중시하여 지역색도 상대적으로 덜 한편이다. 타인에 대해 관심이 많고 각종 단체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다. 또 NGO 지지자들은 정보를 라디오에서 얻기보다 신문을 주로 읽는 편이다. 특히 한겨레신문을 주로 읽는 사람들은 친NGO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미국정부와 일본정부에 대해 NGO 지지자들은 NGO 비판자들보다 더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정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2
훑어보기	3
I. 말	5
II. NGO지지층/비판층의 개념화	6
III. NGO지지/비판의 사회경제적 배경	13
IV. NGO지지/비판의 이념적 분열	15
1. 절차적 민주주의 vs 실질적 민주주의	15
2. 진보 vs 보수	20
3. 여(與)성향 vs 야(野)성향	24
4. 친북성향 vs 친미성향	29
V. NGO지지/비판의 대(對)정부 관계	34
VI.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에 대한 다변수 분석	39
VII. 시민운동회원 활동유무에 대한 다변수 분석	44
VIII. 맺는말	46

1. 들어가는 말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매우 높아졌다. 특정 이슈에 대해 시민단체가 대립축의 한 쪽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에 대한 시각도 매우 대립적인 것도 사실이다. 시민운동가에 대해서도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보는 긍정적 견해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기 출세를 위해 사회를 이용한다고 보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계층과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계층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인식을 비교해봄으로써 누가 한국 시민단체 지지계층을 구성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기존 문헌은 사실 연구라고 붙이기에는 좀 어색하다. 이미 국내에서 NGO와 관련된 대학의 학과, 학회, 학술회의 등 여러 가지가 조직되어 있지만, 논() 또는 학(學)에서 필수적인 검증된 법칙 또는 이론 체계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찬반논쟁은 논리에 의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마치 패거리 싸움을 연상시키고 있다. 시민단체에 관한 연구는 자칫하면 시민단체를 두고 찬반논쟁에서 한 쪽을 편드는 패거리 행위로 되거나 아니면 학자들이 흔히 범하는 양비론(兩非論)으로 되기가 쉽다.

본 연구는 편들기와 양비론 모두 피하고자 한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일관된 논리를 위해서는 좀 더 분석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림과학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01년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다.

II. NGO지지층/비판층의 개념화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3.1%가 지난 일년 동안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가운데 0.7%는 회원가입만 되어있다고 대답하였고, 1.3%는 모임에 가끔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0.9%는 모임에 자주 참여한다고 하였고, 0.2%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활동한 시민단체의 수로는 2.7%가 1개 단체를, 0.3%가 2개 단체를, 0.1%가 4개 단체를 언급하였다.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계층과 지지하지 않는 계층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지지/반대는 이해관계에 좌우될 때가 많다. 시민단체의 입장이 자신의 이해와 일치할 때에는 그 시민단체를 지지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치될 때에는 그 시민단체에 대해 반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반대라는 개념보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불신의 개념이 좀 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 응답자의 73.2%가 시민단체를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표 1>의 기관 가운데 낮은 신뢰비율의 기관은 국회로 8.7%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시민운동가에 대해서는 71.6%의 응답자가 신뢰한다고 대답하였으며, <표 2>의 사회지도층 가운데에는 정당간부가 10.4%라는 가장 낮은 신뢰비율을 받았다.

시민단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시민단체의 규범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가 한국인들로부터 다른 기관보다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1〉 기관/제도에 대한 불신/신뢰의 상관계수

	국회	지자체	지방의회	정당	행정기관	군대	경찰	검찰	법원	선관위	재벌	중소기업	노조	금융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의료기관	종교단체	
청와대																			
국회	.41																		
지자체	.34	.38																	
지방의회	.34	.42	.70																
정당	.30	.51	.37	.46															
행정기관	.46	.38	.49	.43	.36														
군대	.31	.24	.32	.27	.20	.43													
경찰	.29	.31	.37	.36	.30	.42	.54												
검찰	.34	.34	.34	.35	.35	.42	.41	.63											
법원	.32	.26	.32	.31	.26	.39	.42	.48	.67										
선관위	.31	.22	.27	.25	.20	.35	.40	.36	.40	.51									
재벌	.20	.31	.24	.28	.26	.29	.28	.32	.29	.26	.34								
중소기업	.22	.15	.25	.24	.15	.26	.33	.27	.27	.31	.29	.30							
노조	.16	.20	.16	.22	.20	.17	.23	.25	.31	.29	.27	.22	.44						
금융기관	.30	.26	.28	.27	.23	.40	.34	.37	.39	.40	.38	.34	.30	.30					
교육기관	.22	.29	.25	.28	.23	.32	.37	.34	.31	.31	.33	.28	.24	.23	.48				
언론기관	.18	.26	.22	.21	.22	.23	.27	.29	.30	.29	.28	.33	.23	.24	.33	.40			
의료기관	.21	.28	.26	.26	.25	.30	.32	.34	.32	.34	.28	.31	.23	.26	.43	.42	.45		
종교단체	.16	.20	.21	.20	.14	.19	.28	.25	.24	.25	.26	.27	.12	.13	.22	.33	.26	.41	
시민단체	.18	.04	.16	.13	.06	.14	.20	.19	.22	.29	.28	.09	.28	.32	.25	.22	.31	.22	.32

〈 2〉 분야별 지도층에 대한 불신/신뢰의 상관계수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정당간부	고위공무원	군장성	경찰간부	검사	판사	변호사	재벌오너	기업인	노조간부	금융인	교사	교수	언론인	연예스포츠인	의사	종교인
대통령																					
국회의원	.38																				
지자체장	.34	.55																			
지방의원	.31	.55	.78																		
정당간부	.34	.64	.59	.69																	
고위공무원	.34	.50	.50	.51	.56																
군장성	.26	.39	.48	.43	.41	.56															
경찰간부	.31	.47	.46	.48	.50	.59	.65														
검사	.33	.41	.44	.44	.41	.54	.51	.62													
판사	.33	.36	.40	.38	.35	.52	.49	.55	.82												
변호사	.25	.32	.36	.37	.37	.42	.39	.42	.52	.53											
재벌오너	.16	.39	.35	.37	.43	.42	.40	.42	.33	.33	.44										
기업인	.19	.31	.34	.33	.32	.35	.39	.37	.36	.38	.41	.59									
노조간부	.20	.21	.25	.26	.24	.22	.30	.27	.35	.34	.39	.28	.40								
금융인	.23	.32	.40	.36	.34	.39	.43	.39	.42	.42	.41	.39	.46	.41							
교사	.18	.19	.28	.25	.22	.25	.31	.28	.29	.30	.28	.19	.26	.22	.39						
대학교수	.16	.21	.33	.29	.23	.27	.37	.31	.33	.32	.32	.29	.33	.29	.44	.70					
언론인	.19	.22	.27	.23	.26	.28	.26	.28	.35	.37	.32	.30	.34	.37	.36	.36	.43				
연예스포츠인	.19	.18	.25	.21	.21	.26	.29	.27	.24	.29	.26	.28	.31	.29	.26	.19	.23	.45			
의사	.19	.25	.29	.31	.268	.31	.34	.37	.40	.37	.38	.32	.32	.25	.37	.42	.45	.40	.35		
종교인	.18	.18	.23	.24	.22	.23	.25	.26	.23	.25	.26	.25	.26	.27	.33	.36	.38	.30	.23	.33	
시민운동가	.21	.12	.16	.17	.13	.16	.17	.14	.22	.26	.20	.11	.21	.37	.26	.27	.27	.34	.23	.2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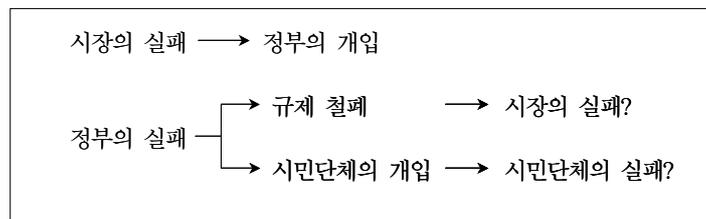
8 시민운동 지지층과 비판층의 비교분석

〈 1〉은 한국인이 특정 기관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와 다른 특정 기관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간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정리한 것이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간의 관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더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에서 시민단체를 신뢰하는 수준과 가장 큰 상관계수(+.32)를 보여주는 변수는 노조를 신뢰하는 수준과 종교단체를 신뢰하는 수준이다. 즉 노조 또는 종교단체를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를 신뢰하는 정도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기관은 국회(+.04), 정당(+.06), 재벌(+.09) 등의 순이다. 즉 시민단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정치권/재벌에 대한 신뢰보다 노조에 대한 신뢰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표 2〉는 한국인이 특정 사회지도층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와 다른 특정 사회지도층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종교인에 대한 신뢰여부는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여부와 +.44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가장 높은 상관계수이다. 즉 한국인들에게 시민운동가 이미지는 종교인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상관계수의 변수는 노조간부에 대한 신뢰여부이다(+.37). 노조와 유사한 이미지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변수는 재벌오너에 대한 신뢰여부(+.11)이고, 두 번째로 낮은 상관계수의 변수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여부(+.12)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만 판단한다면, 한국의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는 친()종교단체적이고 친(親)노조적이며, 동시에 반(反)국회적이고 반(反)재벌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추정할 수 있다.

〈 1〉 시장과 정부의 실패 및 시민단체



시장실패를 이유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었지만 정부개입의 많은 부분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한 정부실패에 대한 수습안으로 한편에서는 실패한 정부기능을 비(非)정부기관이 보완하여 맡는, 즉 시민단체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하며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시장실패의 재연이 될지 여부는 구체적 규제개혁에 따라 다를 것이며,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개입도 시민단체의 실패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시민단체의 활동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기업, 정부, 시민단체의 3자 관계는 나라마다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① 권위적인 정부를 두고 기업과 시민단체가 민간부문으로 묶여 있는 상황, ② 기업과 정부가 정경유착으로 하나의 편이 되고 그 반대편에 시민단체가 있는 상황, ③ 시민단체가 정권홍위병으로 정부와 함께 하나의 편이 되고 그 반대편에 시장이 홀로 있는 상황 등 세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시장이 먼저 형성된 곳에서는 기업이라는 정(正)에 대해 정부가 반(反)으로 작용하다가 적절한 규제하의 합(合)이 형성된 이후, 다시 새로운 반(反)으로 시민단체가 등장하여 이것이 새로운 합(合)을 형성하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시장보다 정부가 먼저 형성된 곳에서는 그 정반합(正反合)의 진행내용이 다르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은 정부의 실패를 수습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적 시민운동도 시장의 역기능을 억제시키고 시장의 순기능을 제고시키려는 취지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퓰리즘 정권에 대한 홍위병적 유대는 정부실패에 따른 시장의 비중 확대를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켰다. 이 경우의 시민단체 개입은 정부실패에 대한 수습이라기보다 시장이 실패하기도 전에 시장 기능에 대한 사전 경계의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여기서는 투쟁대상이 정부에서 점차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먼저 형성된 곳은 시장이 먼저 형성된 곳과는 다른 갈등양상이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표 1>의 상관계수 비교에서 보듯이 한국의 시민단체 지지자 성향은 기성 정치권과 대기업에 대해 대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민단체 지지/비판의 계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지지 개념에 대한 운용적 조작(operational manipulation)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에 대한 단순한 신뢰/불신의 개념은 주의를 요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민단체를 신뢰한다고 대답하는 유권자들은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특정 기관과 특정 분야 지도층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다른 기관과 지도층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특정 기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조사에서 “노사간 불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심각하다고 대답하였는데(<표 18> 참조), <표 1>에서 노조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기업(재벌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뢰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r = +.22 \sim +.44$). <표 2>에서도 노조간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일수록 재벌 오너와 기업인을 신뢰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r = +.28 \sim +.40$).

시민단체는 글자 그대로 정부기관과는 대립적인 속성을 지니지만 <표 1>과 <표 2>에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정부기관과 정부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신뢰한다 또는 불신한다는 인식에 대한 코딩은 인식 대상보다 인식 주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의미의 신뢰/불신의 개념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른 기관에 대비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불신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응답자별로 시민단체를 제외한 기관들에 대한 신뢰정도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시민단체를 신뢰하는 정도의 값에서 그 평균값을 공제함으로써 다른 기관에 대비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정도의 값을 계산한다. 이 값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와 불신을 판별한다.

설명의 편의상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과 불신계층의 표본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논지를 전개한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시민단체를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계층과 상대적으로 불신하는 계층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딩률에는 별 문제가 없다. 더구나 이러한 시민단체 지지의 상대적 지표는 시민단체 등장 자체가 다른 기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정치이념처럼 시민단체 지지/비판도 상대적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된다.

여기서 이용하는 조사자료의 1,002명 응답자 가운데 997명이 모든 기관/단체에 대해 신뢰/불신을 대답하였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정도의 값이 중간값 미만인 483명의 응답자를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으로 분류하였고, 중간값 이상인 514명의 응답자를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과 불신계층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였다. 다른 사회지도층에 대비한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정도는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정도의 값에서 나머지 사회지도층에 대한 평균 신뢰정도의 값을 뺀 값이다.

1,002명의 응답자 가운데 995명이 모든 사회지도층에 대해 신뢰/불신을 대답하였다. 다른 사회지도층에 대비한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정도가 중간값 이상인 511명을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으로 분류하였고, 중간값보다 작은 484명을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 신뢰/불신 계층과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불신 계층으로 분류된 사례수와 백분비는 <표 3>과 같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불신 표본 크기는 997명이고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불신 표본 크기는 995명이지만 결측치(missing value)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 3>의 표본 크기는 991명이다.

〈 3〉 시민단체/시민운동가의 지지계층

	대한 불신계층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합 계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341(34.4%)	136(13.7%)	477(48.1%)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141(14.2%)	373(37.6%)	514(51.9%)
합 계	482(49.6%)	509(51.4%)	991(100.0%)

〈 3〉에서 보듯이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불신은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불신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하지만 두 존재에 대한 신뢰/불신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여부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III. NGO지지/비판의 사회경제적 배경

〈 4〉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성 분포

		남성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53.6%	46.4%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47.3%	52.7%	$\chi^2 : 4.013$, 유의도 : .045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56.4%	43.6%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45.0%	55.0%	$\chi^2 : 12.912$, 유의도 : .000

〈표 5〉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연령 분포

	세대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25.3%	22.8%	21.5%	13.7%	16.8%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32.7%	27.6%	17.9%	10.9%	10.9%	$\chi^2 : 16.529$ 유의도 : .002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25.4%	23.1%	20.9%	13.8%	16.7%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32.7%	27.4%	18.4%	11.2%	10.4%	$\chi^2 : 15.975$ 유의도 : .003

남성들이 더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표 4〉에서 유의도란 비판/지지와 여성/남성이 서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올 확률이다. 예컨대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신뢰가 여성/남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표본 속성으로 인해 〈표 4〉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4.5%라는 것이다. 유의도로 판단컨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신뢰가 여성/남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 〈표 5〉에서 보듯이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의 50% 이상을 40세 이상의 장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신뢰계층의 60% 이상을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 6〉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교육수준 분포

	교육수준							
	무학 또는 한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5.0%	7.9%	10.4%	39.5%	14.3%	21.3%	1.7%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3.3%	5.8%	8.2%	38.1%	16.0%	27.4%	1.2%	$\chi^2 : 9.265$ 유의도 : .159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5.2%	8.3%	10.3%	38.8%	13.0%	22.9%	1.4%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2.9%	5.5%	8.0%	38.7%	17.2%	26.2%	1.4%	$\chi^2 : 11.341$ 유의도 : .078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과 불신계층간의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표로 학력과 불신/신뢰의 관계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잠정적으로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보다 신뢰계층에서 고학력자를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다.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여부와 결혼 상태의 교차표는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결혼을 한번 하여 살고있는 사람들이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뿐만 아니라 신뢰계층에서도 주를 형성하고 있지만, 불신계층에서 더욱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보다 신뢰계층에서 미혼인 사람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초혼이든, 동거이든, 사별을 했건 그러한 경험들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에서 조금 더 자주 발견된다.

〈표 7〉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결혼상태

	결혼상태						
	미혼	초혼	이혼/별거	재혼	사별	동거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22.6%	67.7%	0%	.6%	5.4%	3.7%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29.6%	64.6%	1.4%	.4%	2.5%	1.6%	$\chi^2 : 21.559$ 유의도 : .001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22.9%	68.8%	0%	.4%	4.5%	3.3%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29.4%	63.8%	1.4%	.6%	2.9%	2.0%	$\chi^2 : 15.089$ 유의도 : .010

〈 8〉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신문구독여부

	일간신문이 있다	신문을 읽지 않는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77.6%	22.4%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82.7%	17.3%	$\chi^2 : 3.997$, 유의도 : .046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76.9%	23.1%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83.6%	16.4%	$\chi^2 : 7.059$, 유의도 : .008

,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외에도 출신시도, 도시화, 소득수준 등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변수가 많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들은 없다. 다만 〈표 8〉에서는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시민단체/시민운동가를 지지하는 반면에, 신문을 읽지않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IV. NGO지지/비판의 이념적 분열

1. 절차적 민주주의 vs 실질적 민주주의

상당부분은 상호인지하는 게임규칙이 달라서일 때가 많다. 예컨대 병역면제의 경우도 게임규칙을 지킨 행위와 게임규칙을 어긴 행위간의 경계선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정치게임의 규칙에 대한 인식도 사람들마다 다르다. 한 개인의 가치관과 행태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형성되고 변화한다. 개인적 가치관의 균집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와 연관될 때에는 가치관의 이념화로 불릴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기준도 이념의 한 기준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투명한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차보다 내용과 결과가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는 경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실질적 민주주의’의 이분론은 투명주의-여과주의, 개방성-폐쇄성, 객관성중시-주관성중시, 가치중립-가치개재, 이성중시-감성중시, 불신사회-신뢰사회, 제도주의-문화주의, 과정중시-결과중시, 형식주의-실리주의, 원칙주의-융통주의, 약속준수원칙(pact sunt servanda)-사정변경원칙(rebus sic stanti- bus), 법치주의-인치주의, 보편성-특수성, 분석적 접근-종합적 접근 등의 이분론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바늘도둑’도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고 본다. 반면에 약속은 깰 수 있다고 보거나 지도자의 위약(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해보상에서 무허가건축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입장이라면, 무허가건축물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것들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미국가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게리하트 후보 사퇴 등에서 보듯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요시 여긴다. 예컨대 미국사회에서는 시험부정행위자를 멸시하고, 방치자의 무책임도 질책하며, 시험부정행위를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한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부정행위를 일종의 의리차원에서 묵인하고 오히려 고발자를 소외시키는 경향도 있다. 구미국가들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인치적 군주제에서 법치적 공화제로 바뀌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성숙된 것이라면, 한국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가 절차보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강화로 쟁취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유권자들이 구미국가들에 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덜

것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실질적 민주주의론자의 시각에서는 절차의 강조가 독재로부터 벗어나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에 방해된다고 인식하였을지도 모르는 반면, 절차적 민주주의론의 시각에서는 원칙의 경시가 독재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특히 법에 대한 인식은 받아들이는 게임규칙에 큰 차이를 가져다준다.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편법을 법 테두리 내에서의 요령과 능력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추구한다. 반면 법치주의를 그렇게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편법이나 불법이 동일한 것이며 부당한 법에 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법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편법과 위법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다.

〈 9〉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규제 필요성 인식

	믿고 살아가는 신뢰사회에서는 굳이 각종 규제/절차가 필요 없다		
	않는다	동의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60.0%	40.0%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70.4%	29.6%	$\chi^2 : 11.871$ 유의도 : .001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62.8%	37.2%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67.9%	32.1%	$\chi^2 : 2.854$ 유의도 : .091

〈표 9〉에서 보듯이 규제와 절차의 중시는 시민단체 신뢰계층에서 더욱 발견된다. 즉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에서조차 각종 규제/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절차 무시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 절차의 경시는 결코 시민단체의 암묵적 지지계층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권력기관에서의 절차무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행동으로 인해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증대되는 것이다.

규제와 절차의 중시는 자율적인 자제만으로 사회정의를 실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표 10〉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남을 이용하고 속이려든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보다 신뢰계층에서 더 높았다. 〈표 9〉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은 불신계층보다 규제와 절차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10〉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성악설(이기주의) 인식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남을 이용하고 속이려든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32.1%	67.9%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24.6%	75.4%	$\chi^2 : 6.964$ 유의도 : .008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29.3%	70.7%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27.3%	72.7%	$\chi^2 : .532$ 유의도 : .466

〈표 11〉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사기·절도 피해경험 유무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사기나 절도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67.3%	32.7%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55.3%	44.7%	$\chi^2 : 15.172$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64.5%	35.5%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57.7%	42.3%	$\chi^2 : 4.737$ 유의도 : .030

대한 성악설적 인식은 개인의 경험과도 관련되어 있다. 사기와 절도를 당한 경험빈도도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에서 더 관찰된다. 이처럼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는 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기본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 12〉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차별경험 유무

	승진, 기타 여러 가지 경쟁에서 성, 연령, 장애, 학벌, 출신지역 등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81.6%	18.4%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73.5%	26.5%	$\chi^2 : 9.194$ 유의도 : .002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81.2%	18.8%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73.4%	26.6%	$\chi^2 : 8.616$ 유의도 : .003

절도의 경험처럼 차별의 경험도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여부에 영향을 준다. 즉 취업이나 승진 등 여러 경쟁에서 성, 연령, 장애, 학벌, 출신 지역 등으로 인해 차별을 당한 사람들은 다수가 시민단체/시민운동가를 더 지지하지만, 차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수는 시민단체/시민운동가를 지지하지 않는다. 차별을 당한 이유로 해당자의 55.9%는 학벌(학력/학연)을, 32.6%는 연령을, 24.7%는 출신지역을, 22.5%는 성(남/녀)을, 4.0%는 장애를 언급하였다.

사기절도와 차별을 당한 경험 유무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에서 더 관찰되듯이, 중립성에 대한 회의감도 시민운동가 신뢰계층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다. <표 13>은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은 중립성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불신계층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중립성 실천 난이도 인식

	중립성이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다	어렵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48.5%	51.5%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41.3%	58.7%	$\chi^2 : 2.622$ 유의도 : .105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51.1%	48.9%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38.5%	61.5%	$\chi^2 : 7.857$ 유의도 : .005

시민단체 힘의 원천으로 중립성과 전문성을 말하는데, <표 13>은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의 한국 시민운동가 리더십의 현실적 원천이 중립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익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익에 대한 견해차가 많으면 그것은 이미 공익이 아닐 수 있다. 합리성과 중립성에 기초한 공익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바로 시민단체의 존립근거인 것이다. 만일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공익실현을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다. 비합리적이거나 편파적인 공익주장은 공익으로 포장된 이익집단의 사익추구에 불과한, 즉 위장된 공익일 뿐이다.

물론 <표 13>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계층은 각종 절차와 법규가 공평무사하게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민운동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시민운동가를 불신하는 계층은 시민운동가의 존재가 중립성 실천에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민운동가의 존재를 새로운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이 비판자들보다 중립성 실천에 대해 더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 14〉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신뢰필요성 인식

	신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6.6%	93.4%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4.3%	95.7%	$\chi^2 : 2.673$ 유의도 : .102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7.6%	92.4%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3.3%	96.7%	$\chi^2 : 9.029$ 유의도 : .003

<표 14>에서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사회에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사회에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보다 신뢰계층에서 더 높게 발견되며, 그만큼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2. 진보 vs 보수

‘민주주의’-‘실질적 민주주의’ 이분론과 관련 있는 이념적 기준은 ‘보수’-‘진보’의 이분론적 기준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원칙을 중요시하고 따라서 변화를 가져온다기보다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보수성향을 지닌다. 반면 실질적 민주주의는 원칙을 상대적으로 경시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성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해서 진보-보수의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는 연령일 때가 많다. 즉 젊은 세대들이 진보적이라면 나이 든 세대들은 보수적이다. 연령변수는 교육수준과 관계 있고 교육수준은 소득수준과 관계 있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교육수준이 진보-보수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연령만이 진보-보수에 영향을 줘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수준에 따라 진보-보수가 갈라지는 오해를 주는 것이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진보-보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유권자의 이념별 사회경제적 배경은 서구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서구에서 좌파 또는 진보세력의 지지기반으로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비전문직층이 대한민국에서는 진보세력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변화-안정’과 ‘복지비우선-국방비우선’에 대해서 소득이 낮다 하여 ‘진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복지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복지비우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오히려 국방비우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며 ‘안정’을 선호한다. 오히려 고소득층이 ‘복지비우선’을 선호하고 있다. 진보계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들이 부유층에 대해 세금 부담을 증대시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서구와 달리, 대한민국의 이념적 분포는 진보세력의 주요 지지층이 저소득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진보세력의 지지기반이 고소득층과 고학력자라고 보기 힘들며, 저연령층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 15〉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보수/진보 성향

	바라보고 해결하는 측면에서 본인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적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60.4%	39.6%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56.6%	43.4%	$\chi^2 : 1.424$ 유의도 : .233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64.3%	35.7%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53.0%	47.0%	$\chi^2 : 12.845$ 유의도 : .000

〈 15〉는 한국인의 대()시민단체/시민운동가 신뢰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신뢰가 보수/진보 성향과 별 관련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신뢰는 보수/진보 성향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시민운동가에 대해 불신하는 계층의 약 3분의 2는 본인 자신을 보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운동가에 대해 신뢰하는 계층의 보수/진보 성향이 반분(半分)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층들은 자유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시민운동가를 제외한 국내의 많은 시민운동가들의 활동을 그 동기면에서 또 절차상에서 많은 의구심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즉 시민운동가들을 순수하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모순적 행동을 일삼는 사회활동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역적 단위에서 소수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념적 차원의 진보로 정체성을 제고하여 소수상황을 극복하려 시도함으로써 보수층의 위기의식은 더욱 증대되었던 것이다.

〈 16〉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보수-진보간 갈등인식

	-진보간(좌파-우파간)의 불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35.3%	64.7%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21.9%	78.2%	$\chi^2 : 22.094$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32.5%	67.5%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24.5%	75.5%	$\chi^2 : 7.799$ 유의도 : .005

〈표 16〉에서처럼 다수의 한국인들은 보수-진보간 또는 좌파-우파간의 불신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수-진보간 또는 좌파-우파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비율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보다 신뢰계층에서 더 높다. 계층간(빈부간) 불신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의 대다수가 계층간(빈부간)의 불신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표 17〉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 17〉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빈부간 갈등인식

	(빈부간)의 불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22.6%	77.4%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15.4%	84.6%	$\chi^2 : 8.347$ 유의도 : .004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23.6%	76.4%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14.7%	85.3%	$\chi^2 : 12.625$ 유의도 : .000

〈표 18〉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노사간 갈등인식

	노사간의 불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20.8%	79.2%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16.6%	83.4%	$\chi^2 : 2.920$ 유의도 : .088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22.2%	77.8%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15.5%	84.5%	$\chi^2 : 7.235$ 유의도 : .007

빈부간 불신의 심각성과 마찬가지로 노사간 불신을 심각하게 보는데, 그 비율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보다 신뢰계층에서 더 높다. 즉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빈부, 노사, 보혁(革)간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19〉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한겨레신문 구독여부

	한겨레신문을 읽는 것은 아니다	주로 한겨레신문을 읽는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94.6%	5.4%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89.5%	10.5%	$\chi^2 : 8.854$ 유의도 : .003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93.8%	6.2%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90.2%	9.8%	$\chi^2 : 4.324$ 유의도 : .038

지지여부는 가장 진보색채의 신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겨레신문 구독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최근 전교조에서 학부모 가운데 한겨레신문 구독자를 더 신뢰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표 19〉는 한겨레신문 구독층들이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해 한겨레신문을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대해 유사한 분석을 하였지만 한겨레신문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표 20〉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부자-빈자 인식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믿는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믿는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80.5%	19.5%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80.2%	19.8%	$\chi^2 : .007$ 유의도 : .932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73.9%	26.1%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85.4%	14.6%	$\chi^2 : 9.438$ 유의도 : .002

한국인들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표 20〉에서 그러한 경향은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계층에서 더 높게 발견된다. 즉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믿는 경향은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보다 신뢰계층에서 더 높게 관찰된다.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불신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민운동가가 아닌 시민단체를 불신/신뢰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믿는지와는 별 관계가 없다.

〈 21〉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출신집안 인식

	집안 출신자보다 그렇지 않은 집안 출신자를 더 믿는다	그렇지 않은 집안 출신자보다 좋은 집안 출신자를 더 믿는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34.1%	65.9%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41.5%	58.5%	$\chi^2 : 1.859$ 유의도 : .173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29.5%	70.5%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45.5%	54.5%	$\chi^2 : 8.766$ 유의도 : .003

〈 21〉에서 좋은 집안 출신자와 그렇지 않은 집안 출신자에 대한 신뢰/불신은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신뢰계층간에는 별 차이를 관찰할 수 없지만, 시민운동가를 불신하는 사람과 신뢰하는 사람들간에는 쉽게 발견된다.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계층은 좋은 집안 출신과 그렇지 않은 출신을 차별화하지 않지만, 시민운동가를 불신하는 계층은 좋은 집안 출신자를 더 믿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사회지도층 인식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대체로 모범이 되게끔 행동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84.5%	15.5%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89.7%	10.3%	$\chi^2 : 6.056$ 유의도 : .014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84.1%	15.9%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90.4%	9.6%	$\chi^2 : 8.977$ 유의도 : .003

〈표 22〉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범이 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23〉에서 그러한 경향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 23〉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경제활동 공정성 인식

	경제활동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67.8%	32.2%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78.2%	21.8%	$\chi^2 : 13.494$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68.5%	31.5%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77.7%	22.3%	$\chi^2 : 10.766$ 유의도 : .001

3. 여(與)성향 vs 야(野)성향

(liberalism)를 진보주의-보수주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자유주의도 보수-진보 가운데 하나에 분명하게 소속시키기가 애매하다.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한국의 자유주의는 여()성향-야(野)성향의 구분에서 야로 규정할 수 있다.

여성향-야성향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을 말할 때 진보-보수만큼 자주 언급되는 것이다. 여야 성향은 안정-견제균형, 편승(bandwagoning)-균형(balancing), 다수제(majoritarianism)-소수제(minoritarianism) 등의 이분론과 관련 있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이후 여야 성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는 교육수준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야성향이 높다. 즉 진보-보수를 나누는 배경변수는 연령인 반면, 여성향-야 성향을 나누는 배경변수는 교육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여야 성향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구분을 의미하고 진보-보수 성향은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구분을 의미한다면,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절차적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표 24〉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즉 진소보로(進少保老)와 여저야고(與低野高)이다.

〈표 24〉 진보/보수 성향과 여/야 성향의 사회경제적 배경

	보수	진보
야 성향	고학력 고연령	고학력 저연령
여 성향	저학력 고연령	저학력 저연령

근대화 단계에서 교육의 강조와 인구의 증가는 고학력자와 저연령층의 비율을 증대시켰고, 이것은 그 계층들의 주류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시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념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부합되고, 집단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와 부합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실질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요시하는 구미국가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독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성향의 편승이 아니라 야성향의 견제와 균형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헌법상의 각종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원칙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불신사회에서는 남에게 힘을 몰아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이 더 선호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헌법상의 주요 직책들이 정권이 바뀌면 임기도 채우지 않고 물러나야 하는 분위기이다. 또 여당이 원내 제1당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 다수당이 야당인 경우에도 그 광역의회 의장은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긍정하는 것은 절차와 견제를 중요시 여기는 구미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여당에서 모든 직책을 다 맡을 거라면 대통령만 뽑으면 되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왜 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물론 절차를 경시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권력을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논리로 합리화될 것이다.

〈 25〉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학력 인식

	저학력자를 더 믿는다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를 더 믿는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35.7%	64.3%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33.6%	66.4%	$\chi^2 : .176$ 유의도 : .674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27.5%	72.5%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40.4%	59.6%	$\chi^2 : 7.080$ 유의도 : .008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를 더 믿는다. 하지만 〈표 25〉에서 보듯이,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계층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지 않다. 공부를 더 했다하여 그것에 비례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에 시민운동가를 불신하는 계층은 고학력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다.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무조건적인 학력철폐 운동은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더욱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대체기준을 제시하면서 학력을 철

캠페인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일 될 것이다.

〈 26〉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동향(鄉) 인식

	다른 사람보다 고향이 같은 사람을 더 믿는다	고향이 같은 사람보다 고향이 다른 사람을 더 믿는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91.5%	8.5%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86.7%	13.3%	$\chi^2 : 3.162$ 유의도 : .075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93.3%	6.7%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84.7%	15.3%	$\chi^2 : 9.080$ 유의도 : .002

흔히 신뢰를 공적(public) 신뢰와 사적(private) 신뢰를 구분하는데, 시민단체/시민운동가의 영역은 분명히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공적 영역을 지향하는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사적 연고를 덜 중요시할 것이다.

〈표 26〉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고향이 다른 사람보다 고향이 같은 사람을 더 믿는다. 그러한 경향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계층보다 불신하는 계층에서 더욱 발견된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계층에서 지역색이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 27〉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사적 연고 인식

	말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인 경우에만 믿음이 간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48.1%	51.9%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44.6%	55.4%	$\chi^2 : 1.220$ 유의도 : .269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50.9%	49.1%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42.0%	58.0%	$\chi^2 : 8.029$ 유의도 : .005

힘의 원천 가운데 하나가 전문성이라고 말해지는데, 〈표 27〉은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이 사적 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계층은 전문가의 말이라도 아는 사람인 경우에만 믿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시민운동가 리더십의 주원천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단순히 전문적인 견해라는 이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감을 가져다주는 별도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를 포함한 지도층에 대한 불신 풍조가 시민운동가 지지계층에서 더욱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로 학벌 철폐운동 같은 것에서 이미 관찰되는 바이다.

〈표 27〉은 시민단체도 하나의 패거리로 작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1인1표식 평등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지만 정치영역에서는 1인1표식 민주주의로 운용될 때가 많다. 이 경우 집단화 또는 조직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쉬운데, 시민단체가 그러한 이익집단으로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표 28〉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형제 신뢰여부

	형제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2.5%	97.5%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6.2%	93.8%	$\chi^2 : 8.223$ 유의도 : .004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3.3%	96.7%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5.5%	94.5%	$\chi^2 : 2.756$ 유의도 : .097

가정적으로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이공계보다 사회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표 28>에서 형제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보다 불신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통적 연고를 중시하는 시민단체 비판자들과 달리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혈연관계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표 29>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대인(人) 신뢰여부

	만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55.6%	44.4%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63.9%	36.1%	$\chi^2 : 7.006$ 유의도 : .008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56.0%	44.0%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63.3%	36.7%	$\chi^2 : 5.463$ 유의도 : .019

사업상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은 불신계층보다 사업상 만난 사람을 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0>에서 여야간 불신정도에 대한 인식도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잠재적 지지자들은 우리 사회의 집단 불신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표 30>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여야간 갈등인식

	여야간의 불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14.3%	85.7%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9.0%	92.0%	$\chi^2 : 10.098$ 유의도 : .001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13.6%	86.4%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8.8%	91.2%	$\chi^2 : 5.851$ 유의도 : .016

〈 31〉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친정부/반정부 성향

	정책에 대한 찬반 측면에서 본인 자신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정부 성향	반정부 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47.9%	52.1%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34.4%	65.6%	$\chi^2 : 18.531$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48.1%	51.9%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34.1%	65.9%	$\chi^2 : 19.921$ 유의도 : .000

〈 31〉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의 약 3분의 2가 스스로를 반()정부 성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에서는 친정부 성향과 반정부 성향이 각각 절반 가량 되는 것과 대조된다. 시민단체는 정부기관과 대립되는 개념이고 따라서 그 지지자도 정부에 대해 더 비판적인 것이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시민단체 힘의 원천으로 언급되는데, 이는 시민단체 지지자들이 비판자들보다 더 반(反)정부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린피스 등 외국의 시민단체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각종 실수를 한 이후에도 생존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일정한 거리감 때문이었다.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시민단체는 역설적으로 그 활동이 개인 출세에는 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적 충원 통로로 활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민단체 또는 시민운동가가 권력과 가까이 할 때 이미 순수한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을 견제한다는 취지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시민단체의 힘도 소멸되는 것도 당연하다.

4. 친북성향 vs 친미성향

시민단체 활동은 국내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대외적 현안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주둔 문제, 차세대전투기구매 문제, 북한 문제 등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른바 이념갈등이 북한-미국이라는 대립축에서도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불신을 외국정부(외국인)에 대한 신뢰/불신과 연계하여 남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의 정부와 사람에 대한 신뢰/불신과 비교하여 보았는데 그 내용은 〈표 32〉에 요약되어 있다.

〈 32〉 대()주변국 신뢰정도와 대(對)시민단체/시민운동가 신뢰여부의 상관관계

	대한 신뢰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
남한 정부	-.124**	-.093**
남한 사람	.008	.004
북한 정부	-.035	-.016
북한 사람	.054	.034
미국 정부	-.105**	-.143**
미국 사람	-.021	-.055
일본 정부	-.088**	-.108**
일본 사람	-.051	-.064*
중국 정부	-.100**	-.081*
중국 사람	-.059	-.055
러시아 정부	-.084**	-.113**
러시아 사람	-.051	-.070*
대만 정부	-.049	-.031
대만 사람	-.015	.000

* p(유의도)<.05, ** p(유의도)<.01

〈 32〉의 상관계수에서 음(-)의 수치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양(+)의 수치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124의 상관계수를 갖는데, 이는 시민단체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남한 정부에 대해 불신한다는 의미이다.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은 한국정부, 미국정부, 일본정부, 중국정부, 러시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다. 즉 남북한과 주변4강의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자는 북한 정부를 제외하곤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이다.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계층이 주변4강의 정부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반면에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주변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치이다. 오히려 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시민단체/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계층들이 북한 사람들을 신뢰하는 약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친북-친미의 대립축에서 시민단체/시민운동가들은 친북/반미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주변 4강의 개별 정부에 대한 불신/신뢰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신뢰를 대비해 보자.

〈표 33〉에서 한국인들 다수가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경향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에서 더 강하다. 즉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는 곧 반미(反美)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33〉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미국정부 신뢰/불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75.8%	24.2%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83.9%	16.1%	$\chi^2 : 10.127$ 유의도 : .001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75.4%	24.6%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84.5%	15.5%	$\chi^2 : 12.990$ 유의도 : .000

〈표 34〉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일본정부 신뢰/불신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88.8%	11.2%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90.9%	9.1%	$\chi^2 : 1.134$ 유의도 : .287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88.8%	11.2%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91.0%	9.0%	$\chi^2 : 1.277$ 유의도 : .258

대한 신뢰여부는 신뢰/불신의 정도를 고려한 상관계수분석에서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함은 이미 〈표 32〉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신뢰/불신으로 코딩한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34〉에서 다른 주변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계층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더 발견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다.

〈표 35〉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중국정부 신뢰/불신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81.1%	18.9%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86.7%	13.3%	$\chi^2 : 5.791$ 유의도 : .016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82.6%	17.4%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85.9%	14.1%	$\chi^2 : 1.930$ 유의도 : .165

〈 36〉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러시아정부 신뢰/불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85.7%	14.3%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90.6%	9.4%	$\chi^2 : 5.894$ 유의도 : .015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85.7%	14.3%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91.1%	8.9%	$\chi^2 : 7.100$ 유의도 : .008

대해서도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더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계층은 러시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하다.

〈표 37〉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북한정부 신뢰/불신

	북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89.8%	10.2%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91.2%	8.8%	$\chi^2 : .596$ 유의도 : .44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90.9%	9.1%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90.6%	9.4%	$\chi^2 : .021$ 유의도 : .886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주장을 할 수는 없으나, 다른 주변국 정부에 대한 신뢰여부와는 정반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다른 주변국 정부에 대해 시민운동가 비판계층보다 더 강한 불신감을 보여주었던 시민운동가 지지계층은 북한정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최근 신뢰감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 표 38〉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남한정부 신뢰/불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56.7%	43.3%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68.7%	31.3%	$\chi^2 : 15.232$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58.1%	41.9%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67.7%	32.3%	$\chi^2 : 9.937$ 유의도 : .002

대한 것은 〈표 38〉에 설명되어 있다.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이 불신계층보다 남한정부를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층은 비판층에 비해서 북한을 제외한 주변 4강의 정부와 남한정부 모두를 더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시민단체 지지층이 북한정부를 신뢰한다는 주장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아니된다. 북한을 제외한 힘 있는 자에 대한 불신이라는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계층의 대() 주변국 인식을 이해할 수도 있다.

주변국 정부에 대한 정확한 신뢰/불신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층과 비판층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층의 국가별 신뢰/불신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2~38〉에서 보듯이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계층들은 남한정부에 대해서 30%대가, 미국정부와 중국정부에 대해 10%가, 러시아정부와 일본정부 그리고 북한정부에 대해 9% 전후가 신뢰감을 표시했다. 즉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자는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자에 비해서 반(反)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V. NGO지지/비판의 대(對)정부 관계

시민단체를 영어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칭하는데, 글자 그대로 시민단체는 정부와는 대칭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대칭적 속성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지와는 종종 모순될 때가 많다.

물론 집권세력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집권세력과 이념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이유로 정권의 흥위병이라고 비판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부영역에서의 시민에 의한 활동이라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계몽책 또는 동원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한 시민에 대한 활동에 불과한 경우이다.

만일 시민단체가 정부와 연계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정부와 대칭 또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다거나 또는 정권과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지지도는 크게 떨어져왔다.

〈표 39~40〉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장기적 정책 그리고 각종 통계나 공()적 자료(정보)에 대한 불신이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계층에서 더 심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먼저 〈표 39〉에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장기적 정책들을 잘 믿지 않는 데, 그러한 경향이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계층에서 더욱 발견되는 것이다.

〈 39〉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정부정책 신뢰/불신

	발표하는 장기적 정책들은 대체로 믿을만하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79.3%	20.7%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87.2%	12.8%	$\chi^2 : 11.095$ 유의도 : .001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80.4%	19.6%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86.7%	13.3%	$\chi^2 : 7.250$ 유의도 : .007

〈표 40〉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정부 발표 신뢰/불신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나 공적 자료(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57.1%	42.9%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68.1%	31.9%	$\chi^2 : 12.780$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59.9%	40.1%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65.8%	34.2%	$\chi^2 : 3.629$ 유의도 : .057

한국인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나 공적 자료(정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장기적 정책만큼 아니더라도 잘 믿지 않고 있다. 〈표 40〉에 의하면 시민단체/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더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 41〉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중앙행정부 업무수행 신뢰/불신

	각 부처 등 중앙행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67.2%	32.9%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78.0%	22.0%	$\chi^2 : 14.797$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68.2%	31.8%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77.1%	22.9%	$\chi^2 : 9.868$ 유의도 : .002

〈 41〉은 정부의 각 부처 등 중앙행정부의 업무수행이 별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에서 더욱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지방정부
업무수행 신뢰/불신

	지방정부(도청, 시청, 군청)의 업무수행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57.3%	42.7%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67.3%	32.7%	$\chi^2 : 10.549$ 유의도 : .001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59.1%	40.9%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65.9%	34.1%	$\chi^2 : 4.994$ 유의도 : .025

중앙행정부의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청, 시청, 군청)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42〉에서 지방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정도는 중앙행정부의 업무수행만큼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이 불신계층보다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 정부정책, 정부발표, 업무수행 등에 대한 신뢰/불신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의도에 기인할 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능력에 기인할 때도 있다. 먼저 정부의 의도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자.

〈 43〉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중앙정부 신뢰/불신

	중앙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 자신을 위해서	집권당을 위해서	몇 몇 큰 대기업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29.3%	40.6%	7.9%	22.2%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32.0%	49.2%	7.3%	11.6%	$\chi^2 : 21.434$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28.0%	41.9%	8.1%	22.0%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33.8%	48.0%	6.9%	11.3%	$\chi^2 : 22.389$ 유의도 : .000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집권당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한 경향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보다 신뢰계층에서 더 높았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계층보다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계층에서 더 높다.

〈표 44〉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중앙공무원 정직/청렴도 인식

	중앙행정부 공무원들을 정직성, 청렴성 측면에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71.2%	28.9%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83.3%	16.7%	$\chi^2 : 20.849$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74.1%	25.9%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80.8%	19.2%	$\chi^2 : 6.409$ 유의도 : .011

〈 45〉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지방공무원 정직/청렴도 인식

	정직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62.1%	37.9%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74.1%	25.9%	$\chi^2 : 16.598$ 유의도 : .000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65.4%	34.6%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71.6%	28.4%	$\chi^2 : 4.432$ 유의도 : .035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직성과 청렴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 공무원이 중앙행정부의 공무원이든 아니면 지방부서의 공무원이든 마찬가지이다. 또 그러한 불신 경향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계층에서 더 강하다.

〈표 46〉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중앙공무원 능력 인식

	중앙행정부 공무원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48.8%	51.3%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58.9%	41.1%	$\chi^2 : 10.222$ 유의도 : .001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46.2%	53.8%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61.4%	38.6%	$\chi^2 : 23.079$ 유의도 : .000

〈 47〉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지지 계층의 지방공무원 능력 인식

	공무원에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계층	48.3%	51.7%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계층	57.2%	42.8%	$\chi^2 : 7.864$ 유의도 : .005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계층	47.2%	52.8%	
시민운동가에 대한 신뢰계층	58.2%	41.8%	$\chi^2 : 12.112$ 유의도 : .001

능력에 대해 살펴보아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6〉은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자의 다수는 중앙행정부의 공무원이 무능하다고 보는 반면에, 시민단체/시민운동가 비판자의 다수는 중앙행정부의 공무원이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에서 보듯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는 정부에 대한 지지와 상충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은 지지기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VI.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에 대한 다변수 분석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비판의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변수와 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직접 관련되어있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 설명변수들을 추려내기 위해서는 다()변수 회귀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구체적인 모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연역적으로 특정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설명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도록 만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위해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비판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값만을 가진 다른 설명변수를 교차하여 분석하는 2×2 교차분석표(cross-table)를 사용하였는데, 다변수 회귀분석에는 원 관측치의 정확성을 위해 연속적인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종속변수인 시민단체/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비판 변수도 지지 또는 비판이라는 2개 값만을 가진 변수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비한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 정도 변수라는 연속적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 표 48〉 시민단체 지지의 사회경제적 배경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값	유의성
남성	.096	.045	.068	2.158	.031
연령	-.003	.002	-.069	-2.180	.029
차별경험	.116	.054	.069	2.165	.031
한겨레신문구독	.231	.082	.089	2.803	.005
상수	.713	.119		5.970	.000

〈표 48〉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여러 변수들로 구성된 여러 모델 가운데 시민단체 지지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의 변수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나열한 것이다. 회귀계수는 상관계수의 부호와 마찬가지로 양(+)은 정의 관계를, 음(-)의 부호는 역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종속변수는 다른 기관에 대비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정도이기 때문에 회귀계수를 해석하기가 복잡하다. 더구나 독립변수들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회귀계수를 통하여 어떠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48〉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학벌(학력/학연)·연령·출신지역·성(남/녀)·장애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한겨레신문을 주로 읽는 사람일수록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를 잘 설명하는 변수들의 순서는 표준회귀계수의 크기에 따라 한겨레신문구독, 연령, 차별경험, 성의 순이다.

〈 49〉 시민운동가 지지의 사회경제적 배경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값	유의성
남성	.121	.046	.084	2.623	.009
기독교	.113	.054	.066	2.119	.034
라디오정보의존	-.508	.207	-.077	-2.462	.014
일간지구독	.155	.058	.085	2.652	.008
한겨레신문구독	.166	.084	.063	1.981	.048
상수	.787	.073		10.742	.000

〈표 49〉는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로 구성된 여러 모델 가운데 시민운동가 지지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의 변수들을 나열한 것이다. 〈표 49〉에 의하면 남성일수록, 기독교(개신교)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라디오를 통해 얻지 않는 사람일수록, 주로 읽는 일간신문이 있는 사람일수록, 한겨레신문을 주로 읽는 사람일수록 시민운동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변수의 설명력 순서는 일간지구독여부, 성, 라디오정보의존여부, 기독교, 한겨레신문구독의 순이다.

〈표 50〉 시민단체 지지 정도의 사회인지적 설명

설명변수	회계변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값	유의성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속이려 든다고 생각한다	.111	.045	.110	2.443	.015
빈부간 불신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107	.042	.115	2.543	.011
중립성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는 전문가만 믿는다	.101	.042	.107	2.400	.017
고향이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087	.041	.094	2.122	.034
일본정부를 불신한다	.166	.047	.158	3.534	.000
상수	-.532	.254		-2.094	.037

< 50>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시민단체를 신뢰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사회인지적 변수들의 목록이다.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악설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남을 이용하고 속이려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인간본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시민단체 지지층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빈부간 갈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사회의 빈부간의 불신과 반목을 인지할수록 시민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더 기대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중립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엄격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은 힘의 우열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인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쩌면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곡학아세(學阿世) 현상을 더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넷째,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전문적 의견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전문가의 말이라도 자신이 아는 사람인 경우에만 믿음이 간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사회지도층 또는 전문인 등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 나름대로의 판단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중립성과 전문성을 시민단체 힘의 원천으로 본다면 한국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는 한국 시민단체들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라서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동시에 한국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도 한국 시민단체들이 편파적이고 비전문적이라서 비판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다른 국가 기관에 비해 상처받지 않아 막연한 신뢰를 받는 것보다는 중립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확고한 지지를 받는 것이 한국 시민단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지역색이 비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물론 시민단체 지지자들도 비판자들처럼 고향이 다른 사람보다 고향이 같은 사람을 더 믿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정도가 시민단체 비판자들보다는 약하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는 전통적 가치가 아니며 탈(脫)근대적 가치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지역주의는 그것이 지역사랑이든 아니면 폐쇄적 지역이기주의이든 전(前)근대적 가치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는 전통적 거리감 기준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시민단체 지지자들은 반일(反日)적이다.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 지지자나 비판자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그 정도가 시민단체 지지자들에서 좀 더 높다는 의미이다.

〈 51〉 시민운동가 지지 정도의 사회인지적 설명

	회계변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값	유의성
사회에 신뢰는 필요하다고 믿는다	.123	.051	.107	2.416	.016
중립성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098	.039	.112	2.528	.012
여야간 불신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114	.045	.116	2.550	.011
사회지도층들은 모범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16	.049	.108	2.377	.018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믿는다	.104	.039	.118	2.693	.007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115	.054	.093	2.107	.036
북한정부를 신뢰한다	.153	.051	.138	3.001	.003
미국정부를 불신한다	.184	.049	.174	3.756	.000
상수	-.173	.346		-.501	.617

〈 51〉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시민운동가를 신뢰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사회인지적 변수들의 목록이다. 첫째,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사회신뢰성의 필요를 더 인지하고 있다. 물론 시민운동가에 대한 비판세력들의 대다수도 사회에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시민운동가 지지세력들에서 더 높다는 의미이다.

둘째,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시민단체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여야간 갈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민운동가 비판자들의 다수도 여야간 불신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시민운동가 지지자에서 더 높다는 것이다. 즉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한국사회의 여러 각도 가운데 빈부간 갈등과 더불어 여야간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넷째,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민운동가에 대한 지지층과 비판층 모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체로 모범이 되게끔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시민운동가 지지층에서 더 높다.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기존 지도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

다섯째,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부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민운동가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 다수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믿지만, 그러한 성향이 시민운동가 지지층에서 더 강하다.

,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대체로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민운동가 비판층의 다수는 사회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측면에서 본인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운동가 지지자들 가운데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수 있지만, 진보-보수라는 상대적 이념기준에 의하면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명확히 진보로 분류된다.

일곱째,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상대적 의미에서 북한 정부를 이해하는 편이다. 물론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이든 비판자들이든 대다수가 북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지만, 시민운동가 비판층에 비해 지지층에서 그 강도가 낮다.

여덟째, 시민운동가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에 비판적이다. 시민운동가를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도 미국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보다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시민운동가를 비판하는 층보다 지지하는 층에서 더 높다. 앞서 북한 정부에 대한 태도를 함께 고려해보면, 시민운동가 지지층들은 비판층에 비해 미국 정부를 더 경계하면서 동시에 북한 정부를 더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북한-미국이라는 대외관계 이념축에서 시민운동가 지지층과 비판층은 서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VII. 시민운동회원 활동유무에 대한 다변수 분석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비판되기도 하는데, 시민단체 지지의 가장 적극적 형태는 시민단체에 직접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난 일년 동안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는 변수를 추려낸 것이 <표 52>와 <표 53>이다.

< 52> 시민단체 회원활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회계변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값	유의성
직능단체 활동	.338	.034	.293	10.065	.000
자선/봉사모임 활동	.116	.016	.214	7.350	.000
정치단체 활동	.102	.031	.096	3.267	.001
향우회 활동	.045	.016	.082	2.906	.004
동호회 활동	.031	.012	.074	2.587	.010
한겨레신문 구독	.056	.018	.087	3.175	.002
중앙일보 구독	.025	.011	.064	2.336	.020
음력 생일	.010	.004	.071	2.576	.010
상수	-.034	.009		-3.655	.000

<표 52>에 의해 시민단체 회원활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단체 활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다른 모임이나 단체에서 활동한 여부이다. 지난 일년동안 직능단체(학회/노동조합 포함), 자선/봉사 모임, 정치단체(정당 포함), 향우회, 취미/문화동호회 등의 모임이나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일수록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높다. 다른 단체 예컨대 종교단체, 종친회, 동창회, 계모임, 인터넷동호회 활동여부는 시민단체 활동여부와 별 관계가 없었다.

시민단체회원 활동여부가 직능단체 활동여부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는 사실에서 시민단체의 회원활동이 일반 이익단체의 회원활동과 그렇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더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직능단체, 정치단체, 향우회 등과는 차별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특정신문 구독이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미 한겨레신문 구독여부는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와 관련이 있음을 보았는데, 한겨레신문 구독은 시민단체회원 활동에도 강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구독도 시민단체회원 활동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조선일보 구독여부와 동아일보 구독여부가 시민단체/시민운동가 지지여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회원활동여부를 전혀 설명하지

점과 대조되는 사실이다.

셋째, 음력 생일 변수가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특이한 사실이다. 생일을 음력으로 응답한 사람일수록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외에도 양()변수분석에서 고학력일수록, 실직한 경험이 있을수록, 주로 읽는 일간신문이 있을수록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다변수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력은 유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3〉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와 모르는 사람(타인)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경제활동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평소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수록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53〉 시민단체 회원활동의 사회인지적 설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값	유의성
지인/타인에 대한 무차별감	.024	.008	.091	2.886	.004
경제활동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020	.008	.082	2.616	.009
타인에 대한 관심	.024	.009	.089	2.840	.005
상수	.074	.039		1.903	.057

VIII. 맺는말

또는 시민운동가를 지지하든 아니면 직접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시민운동가가 되든 그러한 친NGO의 배경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몇 가지로 분류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친NGO 계층은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또 타()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NGO에 대해 좀 더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학벌·연령·출신지역·성·장애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NGO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시킨다. NGO 지지자들은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간본성, 사회지도층, 부자, 전문가 집단 등 기존 질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NGO 지지자들은 빈부간뿐만 아니라 여야간의 불신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사회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불공정하여 중립성 실천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NGO 지지자들은 전통적 연고를 덜 중시하며 지역색도 덜하다. 타인에 대해 관심이 많고 각종 단체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다. 넷째, NGO 지지자들은 정보를 라디오에서 얻기보다 신문을 주로 읽는 편이다. 특히 한겨레신문을 주로 읽는 사람들은 친NGO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미국정부와 일본정부에 대해 NGO 지지자들은 NGO 비판자들보다 더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정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